


『다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b>가 정 통 신 문</b> 유일여자고등학교	<b>정결·충명·단정</b>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01 ☎ 063-245-3310~4 <a href="http://www.yuil.hs.kr/">http://www.yuil.hs.kr/</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근절 홍보 안내

학부모님 여러분, 푸르른 5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화평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근절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Q&A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7.

## 유 일 여 자 고 등 학 교

1.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

2. 적용 대상

공직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정부기관의 공직자
언론인	신문, 방송 등 언론 기관에 종사하는 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

3. 주요 내용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됨.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
부정 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의 부정한 요구, 압력 또는 권유 등을 통해 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4. Q&A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Q	A
적용 대상 관련	A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의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은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종합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에도 의과대학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겸임하고

	유아용품 제조회사 대표 A는 사립고등학교 교장인 B와 평소 절친한 친구 관계이다. B의 배우자인 C가 환갑을 맞이하여 A가 C에게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B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	있다면 학교의 교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함. 사립고등학교 교장 B는 학교의 장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함. C가 받은 금품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유아용품 제조회사 대표 A와 사립고등학교 교장 B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부정청탁의 금지	A는 O대학교(사립) 음악대학 입시에 응시한 아들 B를 위하여 친구인 O대학교 실기평가 담당교수 C에게 아들의 수험번호를 알려주며, ‘아들의 실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권 내의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면 이는 부정청탁인가?	A의 청탁내용은 C로 하여금 청탁금지법 제4조 소정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평무사한 처신의무 등을 위반하도록 함과 동시에 O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범죄를 하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A는 제3자인 아들 B를 위하여 공직자 등인 C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2항에 의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기자에게 직원 할인을 적용해준 결과 객실료가 시가보다 4만5천원 할인된 경우 법 위반이 되나?	객실료 할인과 같은 편의제공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 같은 편의제공은 물품을 의미하는 선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인되는 금액이 5만원 이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됨(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 이 경우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됨. 이들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음.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 됨.